

경제위기속의 건축계 과제 The Prospect of Architecture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작금의 경제위기는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더욱이 2월이면 들어설 새정부의 경제운영지표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합리한 규제혁파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경제개혁으로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은 그동안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대다수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축계 중진 몇분을 모셔 이 미증유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오늘의 시대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건축계의 활발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들이 점증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안과 진로
우습지 않은 우화
빈곳을 채우자

최찬환
조성룡
부대진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안과 진로 The Present and Future of Architecture Firms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그간 지면을 통해 건축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건축실무사회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일을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언급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참관자의 입장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논의하고자 한다.

현안문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근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동안 근대화과정에서 경제의 고도성장과 발전, 도시화, 해외건설, 신도시건설, 주택건설의 확대, SOC 사업, 공공건설과 민간개발이 활기차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계도 꾸준한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성장을 하게 되었다.

건설환경변화는 크게보면 건설물량의 증대, 사업의 대형화와 고도화, 고급인력의 양성과 배출, 기능인력의 수요증대와 공급부족,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 위법부실시공과 대형사고, WTO와 건설시장의 개방 등에 이르기까지 디종 다양하며 건축계 안에서 볼 때, 1, 2급 건축사의 건축사로의 제도개선, 합동사무소, 종합사무소와 단독사무소, 설계와 공사감리의 분리와 통합,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종합설계제도의 시도와 그 부당성에 몇 년 동안이나 있는 힘을 쓸데없이 낭비했는가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건축계의 업역이나 기득권의 싸움으로 비쳐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등록건축사의 양적증대로 인한 치열한 경쟁, 덤펑수주와 설계부실, 건축설계분야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서 오는 기술인력의 확보난과 잦은 직장이동, 그리고 공사감리의 책임한계와 빈번한 처벌, 행정규제로 인한 각종심의, 승인, 인·허가의 복잡한 절차와 업무추진의 어려움, 건축주의 사업성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설계자의 작품성에 대한 애착 등이 복잡하게 얹히고 상호마찰을 일으켜 갈등을 불러왔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축사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집단적 단합의 어려움은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어 있으며, 건축사연금의 해체, 공동사업의 부진, 상호 긴밀한 정보교류와 유대의 결여, 일반 서민계층에 대한 건축서비스가 낮고, 국민의식속에 뚜렷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논리에 밀려 문화창작예술로서의 정신적 활동이라는 측면이 아주 낮게 인식되는 등의 여려사례가 건축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여건이며 오늘날 건축사와 설계사무소가 처한 현실의 여러 당면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면과제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맞이하기 전부터 건축계는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실무과정에서 느껴왔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건설투자가 저조하여 설계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설계사무소부터 일찍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경제적 불황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IMF시대로 대변하는 오

늘의 경제난국은 예외없이 건설부문에도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고 해외건설의 호조에 힘입은 일부 대형 해외건설회사를 제외한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는 사활이 걸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98년도 건설부문의 투자를 85조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신규투자사업의 중지 또는 축소는 물론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나. 정부의 공공공사가 주축이 되는 토목에 비해 민간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이 보다 침체될 것이며 신규투자사업에 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설계업무는 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명운을 걸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의 방편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해고와 실직 등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규투자는 무척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기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위주로 예산배정과 집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며 이것도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할 것으로 보여져 설계시장의 한파는 경제난국이 해결될 때까지 때로는 그 이후라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면과제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쟁력의 확보이다.

설계사무소도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거품 경제의 소산인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제개방화시대에서는 국제경쟁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비슷한 설계용역비에서 우리나라의 실시 설계의 수준이 외국에서의 기본설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사업에 무관심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별사무소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투자와 함께 안해도 될 이중 삼중의 일을 반복하는 셈이 된다. 개별 설계사무소 단위로 하면 비효율의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기존자료의 활용, 정보교류, 기능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등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量)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는 시대로 디자인이나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적 직능인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으로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단거리인 100m의 경주에서부터 장거리인 마라톤까지 모든 종목에서 선수로 뛸 수 없듯이 한 사람의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을 모두 잘 설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개인이 독주하는 사회는 경쟁이 많고 분규

와 불화가 많으나 협력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상호화합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전문성과 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이므로 이제 설계사무소도 전문성을 가져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한가지를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문인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제 건축사도 전문분야의 설계자로 특성화하고 설계사무소도 전문업무영역을 가지고 전문화, 특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설계에 대한 위상정립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사실 의사, 변호사에 비해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국민적인 인식과 직업에 대한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을 만드는 직업으로서 공공성과 문화성, 개인의 재산권과 국가자산인 국토공간의 건설자로서 그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허가에 매달려 위법·불법의 책임을 지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일반서민의 집수리는 외면하고 소수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활동에 국한된 직업이라면 직종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은 거의 어렵다.

어느 직업이고 국민가운데 인식되지 못한다면, 그 직업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활동의 폭은 좁아지고 직업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축설계도 국민가운데 그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그마한 주택의 설계와 증축, 개보수 공사가 설계용역비로 보면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는 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번거로워 매우 힘드는 일이지만 대형건물을 설계하는 것에 비해 헛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서민들에게는 자기와 무관한 큰 건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보다는 자기집의 손질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계층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설계라는 업무가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며 건축사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서비스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타설에 젖어 무심하게 해왔거나 아니면 상호 편의에 의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나 때로는 법령과 제도때문이라고 탓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의 봉사자로의 철저한 직업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몇가지 방안

건축사사무소가 처해있는 현실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비추어 다음의 몇가지 세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

중복업무 등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국가 사회적인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사무소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설계경기에서 여러 사무소가 경쟁적으로 중복업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불가피겠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의 최소화와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 설계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우열을 판단하는 수준이므로 지나친 경비지출이 안되도록 도면분량의 제한과 계획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간단한 기본모형으로 하고 색채투시도 등을 배제한다.

특히 턴키설계는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엄청난 도면작성을 하고 있으며 중복업무의 대표적 사례가 되므로 하루 속히 정부가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설계사무소에서 흔히들 회자되고 있는 사실로서 경기설계에 10개정도 출품하면 1개정도의 당선작도 뽑히기 어렵다고 한다면 떨어진 9개의 작품제작에 낭비적 비용지불을 한셈이므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계사무소가 1개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수주가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개의 타당성조사와 가설계(아이디어설계) 또는 계획설계를 무료로 해야 된다면 분명히 낭비요수가 크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계약도 하지않고 비용도 받지못하면서 같은 설계과제를 여러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맡기는 건축주가 있고 이들 때문에 대가없는 헛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크다. 발주자가 설계용역을 미끼로 설계사무소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덤핑을 유도하고 정보교류가 긴밀하지 못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지만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과 생산성저하의 큰 요인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결부하여 무료설계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보수요율기준에 기획설계와 계획설계의 요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사무소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자기방어와 업계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떤 업종이든 무료로 업무를 해야하는 낭비요인이 있는 한 생산성향상과 고비용의 극복은 어렵다.

이제 새해부터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므로 모든 일은 적정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 경영의 기본은 밀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봉사와 자발적 혁신이 아닌 한 낭비적 헛일, 불필요한 일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시공회사가 그려야 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는 잘못된 일이나 낭비적 업무는 없어야 한다.

2) 유연성과 탄력성

기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 인력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주에 의한 건축설계업무는 그 특성상 경기변화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업무량의 기복이 심하다. 흥수처럼 업무가 몰릴 때는 인력이 모자라고 일이 끝나고 수주가 안되는 기울과 같은 시기에는 인력이 남아돈다. 이와같은 업무와 인력의 편재현상을 줄이는 것이 인간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무소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외부조직과의 계약에 의한 상호협력설계(Joint Venture), 설계사무소간의 연합과 제휴, 직원의 계약직제와 연봉제 도입, 프로젝트별 계약, 성과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유연성과 탄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설계사무소 조직의 대형화와 활성화, 그리고 책임경영을 위한 설계사무소의 연합화와 소그룹별 독립채산제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당장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우선 인력의 Full제 활용으로 유휴인력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무소간의 전략적 제휴와 연합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사무소의 인지도를 높힐 수 있으며 PQ 등 실적 심사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인력교류에 의한 일감의 편중현상에 대응하고 효율적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합동사무소, 종합사무소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사무소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무소 연합제와 인력의 Full제, 협력설계의 강화 등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업역의 확대와 전문화

현재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용역비 규모는 연간 약 2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6,300여 건축사와 5만여명의 종사직원, 그리고 여러 관련 협력회사 직원이 매달려 있다. 시장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화를 하면 업역이 좁아진다고 인식되기 쉬우나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전문의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내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설계사무소의 전문화는 업역의 확대를 위해서나 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건설업체가 설계업을 겸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것이 부당함을 강변한 것도 전문화라는 대세의 흐름에

따르라는 논리이다. 스스로 조직의 전문화없이 자기 업역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설계와 공사감리·시공의 업역 구분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앞서 언급하였으나 건축사가 대형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려면 신고대상인 소규모 건물의 설계, 증개축, 기존건축물의 수리와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활동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정된 좁은 설계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크기는 넓은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좁게는 집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설계·공사감리에서 컨설팅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전문화하므로써 살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는 거의 관심밖에 있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직영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시공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인의 참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4) 공동화사업의 활성화

오늘날 개방화와 국제교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설계사무소별 독립왕국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지탱하기 어렵다. 규모경제라는 것이 있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는 생존전략에 필수적이다. 정보교류, 자료활용, 시설과 기기의 공동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 활발한 협력과 공동공생, 공익증대와 극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피동적으로 정부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자발적 능동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설계사무소는 그 특성상 건축사 개인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소규모가 보편적이며 대형화에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 분산되어 질수록 공동화와 단합된 결집력이 중요하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공동화사업과 결집된 조직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립한 후 효율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제도개선의 필요성

건축사가 잘못된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이와같은 점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공익증대를 앞세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본다.

토지이용계획과 정책의 잘못에 따른 미구잡이식 난개발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축사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용적률)를 추구하는 발주자에게 도시환경의 질적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사업성의 허용범위에서 문화예술성, 작품성을 충족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축사의 책임도 크며, 부실공사가 저가입찰제도와 덤팡수주, 기능인력의 장인정신의 결여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문화수준의 척도가 건축으로 표현된다고 볼 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잘못된 일의 공범자요, 방관자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공사감리와 처벌, 조사 검사업무의 대행과 책임추궁, 건축사의 무한책임 등은 잘못된 연결고리임에 틀림없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역할과 업무한계, 그리고 책임 등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21세기 첨단 선진사회 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설환경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자기일에 책임을 지고 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사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진사회가 건축계에도 찾아오길 기대한다.

우습지 않은 우화 The Unamusing Farce

조성룡 /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미 5년전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을 시작할 무렵부터였다. 사실 그 전까지 설계나 열심히 하는 건축사들에게 무슨 법이나 제도에 대한 식견이 있으며 그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있었겠는가. 늘 바빠서 생각이나 할 겨를이 언제 제대로 있었는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불편한 제도와 말도 안되는 법조항 준수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있었다. 사무소가 영세하다며 세 건축사 이상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종합사무소제도를 십여년간 잘 지켜오고 있었으며 자기가 설계한 주택이나 소규모빌딩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조리'를 미리 막는다는 구실로 감리권한을 빼앗기고도 그저 혀를 칠 뿐 조용하였다. 한 마디로 '양반' 이지만 다른 말로는 '방관자'였다. 그저 일이나 많고 해외로 나가 골프나 즐길 수 있으면 좋았다. 오죽하면 협회 회원용 골프장을 만든다는 헛소문이 나돌기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덜컥 겁이 났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법과 제도속에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기만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 탄 듯한 기분이었다(그때 발간한 1993건축백서의 서문에 '건축의 위기'라고 썼다).

1992년말 '소규모건물의 감리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새건축'이 조직되었고, 1993년에는 '건미준'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건축 운동'을 준비하였다. 건미준은 협회나 정부에 서비스를 걸자고 벌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려는 쪽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건축 운동'을 통해 그 동안의 우리(건축사)의 소극적 자세를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어나가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종합사무소제도, 설계·감리분리제도, 건축사시험제도, 설계경기제도, 도서신고제도, 심의와 인허가제도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